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전남 3만 2,400명 '전국 최다'

84% 외국으로 끌려가...고흥 최대피해 광주는 4,552명...대부분 노무자 생활

일제 강점기에 전남에서만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3만 2천400명이 강제동원됐으며, 이 가운데 84% 이상이 외국으로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제동원된 이들 가운데 72%가 노무자로 일하며 비참한 생활을 견뎌야 했으며, 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도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도 일제강점기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전남지역 민들을 대상으로 강제동원피해신고 접수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3만 2천431명이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두 번째로 접수건수가 많은 경북의 2만 3천490건에 비해 37%인 8천822명이 더 많았다.

광주지역에서는 모두 4천552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노무자가 2천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이 954건, 군속 715건, 위안부 4건 등이다. 일본 등 나라 밖으로 끌려간 경우가 4천72건이며 국내에서 동원된 것은 480건이다.

이번 피해접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만주사변이 발생한 지난 1931년 9월 18일부터 해방 직전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하며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전남의 경우 강제동원 피해 접수자 가운데 남자가 3만 2천83명으로 98.9%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162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가운데 78%인 2만 5천304

명이 현재 사망했으며, 생존자는 6천414명으로 19.7%에 불과했다. 나머지 516명은 행방불명 상태다.

동원지역별로는 국외로 끌려간 피해자가 2만 7천279명으로 집계돼, 압도적으로 많은 84.1%를 차지했다. 동원유형으로는 72.5%에 이르는 2만 3천5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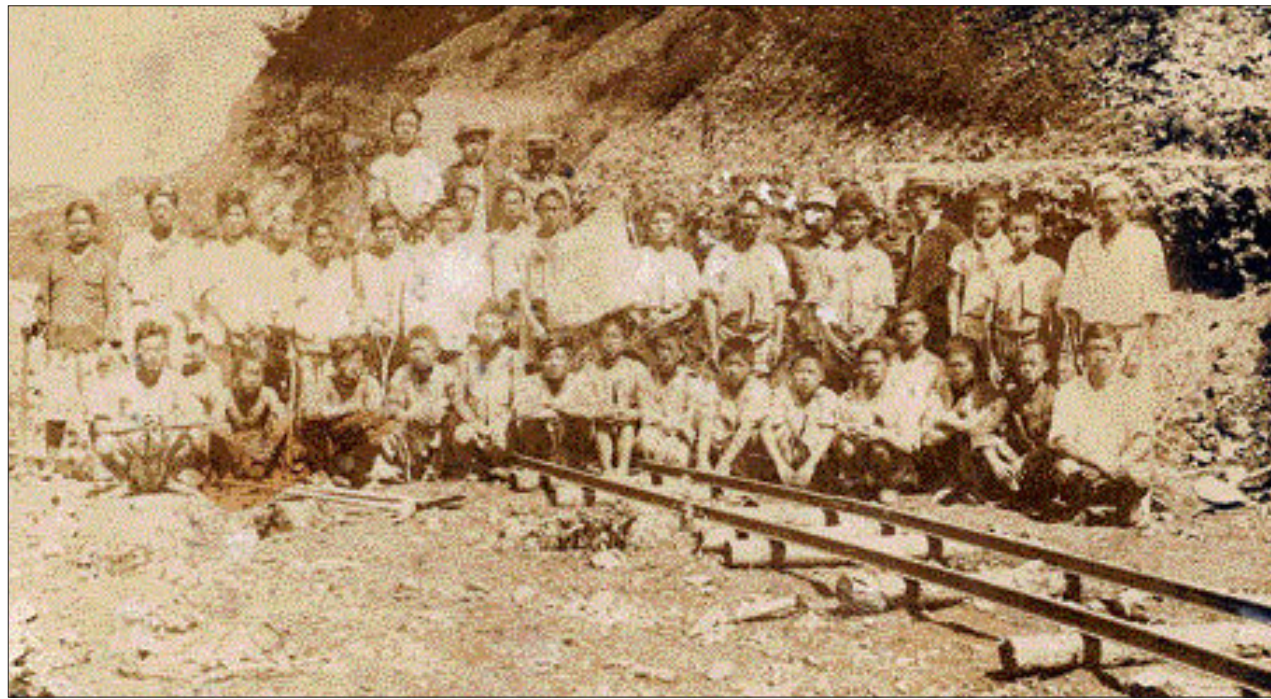
이 노무자로 일했으며, 군인은 12.6%인 4천97명 그리고 군속은 13.8%인 4천487명이었다. 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은 18명이었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별로는 고흥군에서 가장 많은 3천16명이 강제동원피해를 당한 것으로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해남군이 2천288명, 나주시가 2천252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피해신고가 적은 곳은 목포로, 577명이 접수했다.

전남도에서 관련업무를 맡아온 김관둘씨는 "전남지역민들의 피해접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일제 당시 고향이었던 전남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때문"이라며 "실제로 1944년 당시 전남의 인구는 274만 7천819명으로, 경기도의 308만 9천88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일제는 한반도 강점기동안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전투 및 각종 공사에 투입했다. 강제동원된 사람들이 철도공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 청장년을 비롯해 청소년들(앞줄 가운데)까지 다양한 연령계층에서 강제동원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회 제공)

검찰, 친일과 후손 '땅찾기 訴취하' 첫 제동 '재산환수법' 비켜가기 봉쇄

친일과 후손이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려다 검찰에 의해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일과 이재완의 후손이 올해 3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4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돌연 소취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같은 달 25일 동의하지 않았다.

고종황제의 사촌형인 이재완은 대한제국의 외교관 박달 등을 내용으로 한 을사조약 감사사절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과재산환수법)이 지난 해 12월 말 시행된 이후 친일과

땅 소송의 취하 의견이 거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분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을 취하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원천봉쇄해 친일과 후손에게 국가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재완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야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소송법 상 분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취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을 또 다시 낼 수 있어 친일과 후손들의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친일과재산환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취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친일 재산 관련 국가소송은 이완용·송병준·이재극·이근호·윤덕영·민영휘·나기정 의 후손들이 제기한 33건으로 이 중 국

가소 5건, 국가채소(일부채소 포함) 9건, 소취하 6건을 제외한 13건의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다.

소취하 처리된 6건 중 4건은 친일과 재산 환수법 시행 이전에 소취하 절차가 끝났으나 친일과 임종상과 이재극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친일과 재산환수법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5, 6월에 각각 취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친일과 후손들의 소취하 의견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소송을 다시 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실해 소취하에 동의했고 향후 다른 친일과 후손들이 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엇보인다면 소취하 부동의 후 확정판결로 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구 2.4배·GDP 606배 늘어 물가 28.5배...농가는 절반 줄어

■ 광복이후 경제·사회 변화상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지난 1964년에 비해 원유도입비용은 2천298배 늘었으며, 1953년에 비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43배, 국내총생산은 606배로 늘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통계청은 14일 '통계로 본 8·15 광복 이후 경제·사회 변화상'을 발표했다.

◇경제발전=지난 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6천291달러, 국내총생산(GDP)은 7천875억달러를 기록했다. 광복 당시 통계는 없지만 1953년과 비교하면 1인당 GNI는 67달러에서 243배로, GDP는 13억 달러에서 606배로 증가한 비약적인 발전이다.

수출은 1948년 2천200만달러에서 2005년 2천844억2천만달러로 무려 1만2천928배로 폭증했다.

1인당 국민소득 243배
원유도입비용 2,298배
수출 1만2천900배 증가
노년인구 비율 3배로
유소년 비율 절반으로

◇인구 2.4배 증가, 고령화사회 진입=총 인구는 1949년 2천18만9천명에서 지난 해에는 4천829만4천명으로 2.4배 늘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1955년 3.3%에서 지난해 9.1%로 5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유소년 인구 비율은 1955년 41.2%에서 지난해 19.1%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고령화·저출산 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전화 가입대수 폭증=1955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8천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천5백40만대에 이르렀다. 1955년에는 210가구에 1대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가구당 9가구 이상이 자가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가입자 수는 1949년에는 4만1천명으로 1천명 당 2명꼴이었다. 2004년에는 2천287만명으로 늘어나 2명당 1명꼴이었다. 또 초고속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2004년 현재 가입자는 1천만 235명이나 됐다.

◇최대의 자연재해=건국 이래 최대의 자연재해는 1959년 영동과 영호남 지역을 덮친 사라호 태풍으로 사망·실종 849명에 37만여 명의 이재민을 냈다. 광복 이후 최대의 피해를 낸 재해는 1971년 12월 25일 발생한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로 사망 163명, 부상 63명 등 226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광복 이후 최대 산불은 1999년 4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로 임야 3만여ha, 주택 70채, 가축 335마리 등의 큰 피해를 냈다.

◇해외여행자 폭증, 물가 상승=1960년 8천여명에 불과했던 해외여행자수는 지난 해 950여만명으로 증가해 무려 1천200배 가까이 늘었다. 1965년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28.5배, 생산자물가는 16.6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1965년 1만원 했던 상품의 가치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기준으로는 28만원 상당에 해당한다.

◇원유도입량 급증 및 산업구조 급변화=원유도입량은 에너지 과소비적 산업구조와 자동차의 보급으로 1964년 584만배럴에서 2004년 8억2천579만배럴로 142배 늘었고, 원유도입비용은 1천300만달러에서 299억달러로 2천298배 증가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농·수산업이 축소됐지만 철강·자동차·선박·반도체 등이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농가는 1949년 247만4천호에서 2004년에는 124만호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조강생산은 1962년 13만에서 2005년 4천782만으로 370여배 증가해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됐고, 자동차 생산량은 2005년 370여만대를 기록해 세계 5위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선박은 2004년에 1천514만 3천GT를 생산해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반도체는 메모리분야에서 최근 10여년 간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angwon' (창원)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details. Includes a large banner at the top and several smaller boxes for different types of properties like 'Bunbun' (분분), 'Munmun' (문문), 'Mimim' (미미), and 'Hunhun' (훈훈).